광주시 공사 설계변경 혈세 400억 증액

행정사무감사 자료…75건 사업비 늘어나

광주시의 각종 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1건의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했다. 이 가운데 75건은 첫 설계 당시 사업비보다 증액됐고, 16건은 애초 사업비보다 감액됐다.

증액된 총 액수는 무려 410억5천여만원에 달했고, 감액된 총 액수는 11억8천900만원에 그쳐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순증액은 398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조성 건축 공사가 무려 146억2천만원으로 가장 액수가 많았다.

또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 사업 44억1천만원, 광로7호선~운남택지 도로개설공사 34억8천만원, 국도 49호선 본덕~임곡 도로개설 공사 1공구 27억7천만원, 본덕~임곡 도로개설 공사 2공구 27억5천만원, 광주시청사-유촌마을 도로개설 공사 12억1천만원 등 6곳이었다.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감액된 주요 공사는 구동체육관 철거공사 2억1천만원, 본촌산단~예술고 도로 경사완화 공사 8천700만원, 구동체육관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4천500만원, 제2 양산지구 진입도로개설 가로등 공사 3천700만원, 동곡로 확장공사 1천7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건강타운의 경우 시설확충 이나 보강차원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각종 공사과정에서도 공사시행 과정에서 변수가 생겨 설계변경할 것일 뿐이다"며 "처음부터 공사 설계자체가 문제됐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2일 필리핀의 시위대들이 마닐라 대통령 궁 밖에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이날 마닐라에 도착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내년 예산 5조2천억원 확정

올 보다 12.6% 늘어
국고 지원 4조524억

전남도는 여수엑스포 관련 예산 1조7천억 원 등 총 5조2천46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12일 5조2천46억 원(일반회계 4조4천340억 원·특별회계 7천706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4조6천243억 원에 비해 5천803억 원(12.6%)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중앙지원 사업비(특별회계 포함)는 올해 3조6천831억 원에 비해 10%가량 늘어난 4조524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1천313억 원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 진흥 분야 3천733억 원 ▲친환경 농업 육성·농어업인 소득증대 분야 1조205억 원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 환경분야 1조4천701억 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8천459억 원 등이다.

특히 여수엑스포 관련 예산으로는 ▲전주~광양 고속도로 3천786억 원 ▲목포~광양 고속도로 3천450억 원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1천억 원 ▲여수산단 진입도로 1천700억 원 등 1조6천억 원이 국고로 지원되며, 국도 대체우회도로 630억 원과 국지도 2곳 각각 83억 원 등 915억 원은 지방비로 반영됐다.

F1대회의 경우 경주장 건설비 880억 원과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211억 원 등 총 1천400억 원이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도 건의안 880억 원이 포함될 경우 관련 예산은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694억 원이 늘어난 7천706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3천294억 원, 의료급여기금 사업 3천639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370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305억 원, 남도대학운영 82억 원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3천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하고, F1도로 진입도로 개설 189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 276억 원 등 총 70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힐러리 "서해교전, 美대표 방북 영향 없을것"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서해에서 전날 발생한 남북 함정간 교전이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즈워스 대표가 가까운 장래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온 차분한 대응에 고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서해교전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은 보즈워스 대표를 보내기로 한 우리의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은) 그 자체로서 계속해 나갈 중요한 조치"라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과 연관돼 있다. 우리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과 관련, "이번 방문의 목적과 한계를 북한측에 명백히 했다"면서 "이는 협상이 아니다"고 강조,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북미간 실질적 협상이 아님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보즈워스 방북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되돌아 오도록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우리의 북한에 대한 예상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의지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장 선거 벌써 비방전

양형일 前의원 후보군 싸잡아 비난…혼탁 우려
노조 지부장 징계 추진
민주노총 등 반대 투쟁

대학 교수직까지 내놓고 내년 광주시장 선거에 뛰어든 양형일 전 의원이 다른 후보군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시장 후보군들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없이 주로 자신의 비전이나 구상을 어필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날 양 전 의원이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취함으로써 벌써부터 혼탁선거로 몰고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양 전 의원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단체장을 3선이나 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박광태 광주시장을 겨냥했다. 양 전 의원은 "박 시장은 열정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인간의 능력이나 아이디어, 접근법 등에는 한계가 있다"며 "12년간 단체장을 하는 것은 시대 조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또 여론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군 중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강운태 의원에 대해 "15년 전 광주시장을 했던 분이 또 시장에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더 큰 정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던 강 의원의 전력을 들먹였다.

양 전 의원은 또 다른 후보군인 이용섭 의원에 대해서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책무가 있고 의사당에서도 선서를 했다"며 "광주시장 경선에 나오려면 교수직을 사퇴한 자신처럼 의원직을 버리고 정정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유능한 광주시장을 선출하는 것과 의원직 사퇴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예의가 아니다"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또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박광태 시장의 한 측근은 "시장이 광주발전을 위해 정치적인 행보를 지양하고 행정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응할 가치를 못느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와 자치구가 공무원노조 지부장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데 맞서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이 징계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난 7월 공무원시국대회와 관련해 4개 구청의 전국 민주공무원노조 지부장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각 구청에 촉구했다.

징계대상 각 구청 노조지부장은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등 4명이며, 민공노 광주본부장은 경징계 대상이다.

행안부는 이들 지부장들이 공무원법의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광주시에 징계대상 공무원과 징계수위를 정해 내려보냈다.

/윤영기기자 penfoot@

美 민주당 내년총선 다수당 못지킬 듯

유권자 설문조사 "52%만 현직의원 지지"…거부감 팽배

미국 총선을 1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고수하는 게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1일 미국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0월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2천명(등록유권자 1천644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2%만 지역구 현직의원에게 내년에도 다시 표를 던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비율은 의회에서 다수당의 교체를 예고한 여론조사였던 2006년 10월의 50%와 1994 10월의 49%와 거의 비슷하다. 2006년에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다수당이 됐고 1996년에는 반대로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특히 선거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직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다. 미국에서 선거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유권자들은 이번에 2006년 10월 여론조사 때와 동일한 34%만 현직의원을 다시 뽑겠다고 답했다. 이는 1994년 10월 여론조사 때보다는 3%포인트 높은 것지만 오차범위내다.

이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51%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36%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연합뉴스